

전세사기 대책위 출범... '경매 중지 시급'

“빛내서 집 사라”는 대출 중심 정책이 화 키워 “경매 중단이 가장 시급”... 광통전세법 등 제정

두 달 사이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져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전국 단위 대책 위원회가 18일 출범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경·공매로 언제 쫓겨날지 두려워하며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경매 중단과 ‘광통전세 특별법’ 제정 등을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참여연대 등 6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세사기·광통전세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세입자들의 잇따른 죽음은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벼랑 끝으로 등 떠민 정부 정책에 기인한 사회적 타살”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전세사기·광통전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진 배경에는 정부 정책 실패가 있다”며 “악성 임대인·공인중개사, 금융사와 보증기관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과 ‘빛내서 집 사라’ ‘빛내서 세 살라’는 대출 중심의

주거정책, 이를 통해 돈을 버는 투기 부양책이 주거 불안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통전세 특별법 제정(공공매입과 피해구제 등) ▲전셋값(보증금) 규제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책위는 “피해자들이 경·공매로 언제 쫓겨날지 두려워하며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특별법을 통한 피해 구제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경·공매부터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고금리, 집값 하락 등으로 경매나 압류 처분, 전셋값 하락이 발생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위험 상황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전셋값 하락에 따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운 광통전세 문제가 급격히 증가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에서 부도 임대주택 특별법을 제정해 부도 임대주택을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전세사기·광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영정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기존 세입자들을 구제한 바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광통전세 주택의 공공매입과 피해구제를 핵심으로 하는 광통전세 특별법을 조속히 논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빌려주는 전세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는 현행 제도는 세입자의 주거권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며 “보증금을 주택가격의 70%

또는 공시가격의 100% 이하로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가입을 위한 보증금 요건도 같은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전세가율을 규제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책이다”고 덧붙였다.

오유나 기자



여수해경, 작은 점검 하나로 큰 사고 예방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인적요소에 의한 선박 기관(엔진) 및 추진기 손상에 따른 선박사고 증가 추세로 해양 중상자들의 사전점검 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완도해경, 차량 해상투하 실전을 방불케하는 구조훈련 실시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기정)는 현장부서의 인명구조 역량 강화를 위하여 최근 실제 폐차량을 해상 투하, 잠수 인명구조를 실시하였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순천경찰, 이륜차 배달업체 교통사고 예방 간담회 개최

순천경찰서(서장 김중호)는 최근 배달 이륜차 관련 사고 및 사망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18일 순천경찰서 3층 봉화마루에서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순천=김승호기자



담양소방, 목조문화재·전통사찰 화재안전조사 실시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지난 1일부터 이번 달 28일까지 담양향교 등 총 28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광주 동부소방-조선대, 대학생 전문의용소방대 발대식 개최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송민영)는 조선대학교와 지난 14일 동부소방서 대회의실에서 대학생 전문의용소방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슬비기자



광주지방보훈청, 청년층 취업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광주지방보훈청(청장 정홍식)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최근 5년 이상 군 복무한 청년층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1층 양한목실에서 취업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김재환기자

‘고교동창 부적절 채용 논란’ 유병길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중도사퇴

광주교사노조 “감사원 감사 종료 뒤 사퇴 결정”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고교동창으로 알려져 부적절 채용 논란을 빚은 유병길 감사관이 사퇴했다.

1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유 감사관이 이 교육감에게 “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하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유 감사관은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유 감사관은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지난해 9월 1일 임용이후 7개월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 교육감의 개방형 인사 첫 사퇴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유 감사관은 임용 당시 이 교육감의 고교동창으로 알려져 부적절 논란을 빚었다.

교육단체들은 “감사관은 이 교육감을 감사해야 하는데 고교동창이 직을 제대로 수행할 지 의문이다”며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또 일부 교육단체는 감사원에 부적절 채용에 대해 조사를 요구했으며 실제 감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감사 대상자가 중도사퇴가 가능한지를 감사원에 문의했으며 최근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관이 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시교육청 청렴총괄팀 강성도 서기관이 직무를 대리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유 감사관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후임 선임 여부는 이 교육감이 독일 순방에서 돌아온 뒤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교사노조조합은 “이정선 교육감은 감사관 채용 당시부터 ‘유병길 감사관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고 합격자 발표 후에 알았다’고 발뺌했다”며 “감사원 감사가 끝난 뒤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사자의 사표수리로 종결할 미미한 사안이 아닌 형사처벌과 책임자 문책이 뒤따



리아 할 중대사안이다”며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와 이 교육감에 대해 고소·고발 등의 법률적인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환기자

목포시내버스 운영자 “6월까지 운영하고 사업 접겠다”는 의사 전달해

이한철 대표 “적자 가중, 더 이상 경영할 수 없어”

목포시내버스 운영회사인 태원·유진운수 이한철 대표이사가 18일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목포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적자 폭이 가중돼 사업을 더 이상 경영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4일에는 박홍목 목포시장과 문차복 시의장을 만나 “오는 6월말까지 버스를 운영하고 사업을 접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 대표는 버스운행 중단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과 함께 준비기간동안 시내버스 운행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할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7월 1일부터 시내버스 운행 중단으로 대중교통 이용객의 불편과 지역소상공인의 생계에 지장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목포시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교통대책을 수립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말했다.

이어 “목포시에서 시내버스 정상운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면 해당 기간동안 시내버스 운행에 필요한 차량을 비롯한 모든 관련 인프라는 제



공해 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20여 년전부터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재정적자가 꾸준히 발생했다”면서 “지금까지 발생한 310억원의 총 누적부채는 6월말까지 개인 사재를 처분해서 부채를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오는 6월말까지만 정상 경영할 계획”이라고 다시 한번 경영 포기를 공식화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